

‘文 정부 사정기관장’ 尹·崔 대선 직행에 정치적 중립 논란

(윤석열 전 총장·최재형 전 감사원장)

검찰청법 4조 2항, 정치적 중립 의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표에 유감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이 판단할 문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두 사정기관장이 대선에 직행하면서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거세다. /뉴스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장 출신 인사가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세다.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법률 때문이다.

검찰청법 43조와 감사원법 2조는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사정기관장 출신 후보가 한 정파에서 대권 도전을 하면 재직 시절 수사와 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 전 감사원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

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변호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물리학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기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상인) 등 글로벌 국가 지도자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경력을 쌓았던 경우가 많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지만, 다바오시(市) 시장을 오랜 기간 지내고 대통령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 관련 질문에 “검찰총장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2일 정치 참여 선언 이후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다.

여권은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통령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두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화국 기초를 흔들려는 지옥문을 열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정기관장을) 하다 보면 집권 세력과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반사이익으로 바로 정치판에 뛰어 드는 건 동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12일 배재정 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 전 원장은 그의 바람과 정반대로 공직자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가벼이 내던진 ‘그 자체’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직행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 이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 수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두 번째 사례를 지켜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래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도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독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람이 당 총재가 되고,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총재가) 수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수상이 될 순 없다”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출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전의 직책을 맡으면서 순수하게 그 직책에 본연에 맞게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영우 전 의원 “‘최재형 신드롬’ 확산”

“윤석열 전 총장 쏠림 현상, 일시적 지지율로 단일화 논의, 구태 정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원래 플랜 A는 최재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망은 야권에서 뜨거웠지만 적합한 인물이 사실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세론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이 정치에 뛰어 들면서 ‘신뢰할 수 있고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한번 할 때도 됐다’라는 의견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쏠림 현상은 일시적이었고, 대세는 최재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단일화에 대해 “지지율만 가지고 단일화를 논하는 건 구태정치”라며 “국민들에게 평가

미래 세대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최 전 원장에게)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최 전 원장 대선 출마 시기를 묻는 질문에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돼야 하지 어설픔게 남들이 시작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정치 는 안 할 것 같다”며 “‘최재형은 최재형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재형의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 “갑론을박이 있다”며 “오늘(14일)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내려온 것은 정부의 제 1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 감사에 따른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장이 바로 대선에 직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이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자처했다는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



청와대 전경.

‘방역 실패’ 지적에 靑 “동의할 수 없다”

野 “방역 실패” 공세에 반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야당의 ‘방역 실패’ 지적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죄송스러운 마음은 틀림없지만 (방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일 기준 1615명으로 4차 대유행 상황에 이른 데 따른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방역 실패’ 공세에 청와대가 반박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역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원인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매일 수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타남 상황’,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계절적 요인’, ‘휴가철 국민 접촉 활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걱정하면서 방역에 임해 왔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기 Moran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이후 ‘현장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방역 관련 기획과 집행 등 모든 것은 청와대가 위에서 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말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이런 생각들과 의심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힘든 와중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방역 전문가 의견을 가장 우선시해 듣되 정부는 가장 고통받는 민생 경제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하는 것도 고민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결정에 의해 (방역 결정이) 집행되고, 청와대와 방역 당국의 갈등이나 이견은 전혀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경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국민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 조건을 재차 언급한 뒤 “끝까지 저희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 측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청와대 행정관 1명, 코로나 확진... 대통령 접촉 無

같은 장소 근무 전 직원 검사

청와대 행정관 1명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가운데 청와대 근무 직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 검사를 받고 14일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은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이 문 대통령과 접촉한 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전 직원에 대한 PCR 검사 등도 실시 중이다.

한편 청와대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례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근무 요원 등이 있다.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 가운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춘추관이 폐쇄됐다.

/최영훈 기자